

서울 삼양동 빨래골길, 생태거리로 새단장한다

북한산 생태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조성사업에 12월까지 11.7억 투입 자투리땅, 생태에너지 쉼터로 변신

서울 강북구 수유1동 빨래골길 자투리공간이 휴게시설과 녹지를 갖춘 시민 쉼터로 재탄생한다.

10일 서울 강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북한산 생태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자투리땅 내 주민이용 휴게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로 총 11억7400만원이 투입된다.

수유1동은 북한산 주변에 위치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개발 소외지역이다. 구는 "고도제한 등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가 보전돼 주거환경과 생활기반 시설이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난 2018년 빨래골길 확장 개통으로 잔여 부지가 다수 발생했으나 후속계획 없이 방치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가 빈번하



강북구 수유동 자투리땅(쉼터형) 현황.



강북구 수유동 자투리땅(경사형) 현황.

/서울시

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저이용된 자투리땅을 주민의 휴식 및 문화·생산을 도모하는 생태에너지 쉼터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수유1동 비전인 '생태에너지 마을'과 연계한 조성 계획으로 주민이 직접 공간을 활용,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빨래골 생태거리와 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사업 부지는 수유1동 소재 빨래골길과 인근 자투리땅이다. 빨래골길(총연장 500m)은 삼양로77길과 삼양로77가길 일부 구간을 일컫는다.

구는 자투리땅을 쉼터형, 경사형, 보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 활용키로 했다. 쉼터형(수유동 483-3, 484-19, 484-15, 486-495, 633-2, 486-360, 486-653)은 소규모 식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 휴식공간으로 꾸민다. 부정형의 부지 모양과 단차, 교각 하부 등 다양한 대상지 여건을 검토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경사형(수유동 486-351, 486-352, 486-355)은 옹벽 사면의 불법경작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직접 가꾸는 텃밭 정원이나 수직형 화단으로 조성한다.

보도형(수유동 486-1, 486-637, 486-

-488, 486-489, 486-492, 486-493)은 보행자 통행 도로에 파크렛, 가로정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녹지를 형성, 빨래골길의 경관을 향상할 예정이다.

구는 3~8월 빨래골의 지역·문화적 특색과 수유1동 비전인 생태에너지마을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디자인 워크숍도 병행한다.

이후 계약심사와 공사입찰·계약을 완료하고 올 9월 착공해 12월 준공한다. 내년부터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주민 주도의 공간활용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구는 "다양한 형태의 녹색 에너지형 쉼터를 조성해 북한산과 주변 환경을 연결한 빨래골 생태에너지 거리를 구축할 것"이라며 "쉼터에서 주민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형 지역 활동을 시행토록 해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 전담구급대 운영 마곡에 주민참여형 '플러스에너지타운'

감염성 물질 외부유출 방지 장비 서울 전역 26개 감염병 전담구급대 철저한 소독 등 대원 안전관리 만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음압형 이송장비' 28대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압형 이송장비는 감염병(의심)환자를 옮길 때 감염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총 26개의 감염병 전담구급대가 운영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구급대는 감염방지용 보호복, 덧신,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5종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출동하고 있다. 이들은 총 43개소의 감염관리실을 운영, 출동 후 철저한 소독으로 대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격리시설인 감염관찰실은 북동 119



코로나19 전담구급대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센터 1곳, 캠핑카 9곳, 컨테이너 1곳, 서울소방학교 생활관 등 총 1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구급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1393명을 이송했다. 이 중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9일 오전 기준 22명의 소방공무원이 감염관찰 및 자가

격리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상담해야 한다"며 "질본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전담구급대가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이송해야 일반구급대의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40억 사업비 투입

서울시는 마곡지구 에너지 자립 모델을 제시할 '플러스에너지 타운'을 짓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 타운'은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절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도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도입 ▲태양광 공동 발전소 구축 ▲실시간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반응 서비스는 각 세대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계량기로 전기 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에너지 절감 과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마곡지구 1000세대에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

태양광 공동발전소는 마곡지구의 유휴 부지에 약 1MW 용량 규모로 조성한다. 발전소는 시와 민간기업,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함께 운영한다. 연간 예상 발전 수익금 2억원은 건설에 참여한 주민에게 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지역 장학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 통합 플랫폼은 태양광 공동발전소 운영 데이터, 주민 전력 소비 데이터 등을 수집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한다.

시는 3월 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한다.

/김현정 기자

다단계 회원 3500명 불법모집한 일당 적발

서울시 민사단, 피의자 7명 입건

무료 크루즈 여행 등으로 회원 3500명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이 털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회원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피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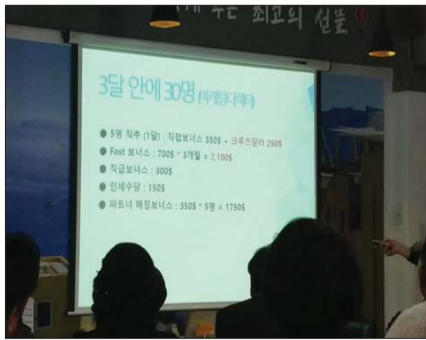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2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하위 회원 35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가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외국계 업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약 20억원이었고, 본사의 상위 회원인 국내 조직 대표가 수당으로 약 3억원을 챙겼다.

회원들이 낸 회비는 이 외국계 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만 쓸 수 있었고, 계획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탈퇴해도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사단은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



불법 다단계 조직 사업설명회 모습.

리하는 전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재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국내 조직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유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신천지 세무조사후 행정비용 구상권 청구"

서울시, 신천지 소유 부동산 세무조사 종교 목적 용도, 적정 사용여부 확인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 등 총 30건이다.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현재까지 확인하로는 서울시 소유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10일 오전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차계약 현황을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로 쓰는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